

분류
기구
인권 주제
대상
목록
분류를 한 개
검

기구 프라이버시 X

분류 구 특별절차 방한 조사 결과 | 유엔문서번호 : A/HRC/46/37/Add.6 |
분 소관 : 인권이사회 | 배포일 : 2022. 7. 8.

국문 제목 대한민국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 (2021)

검색 결과 54. 따라서 특별보고관은 상기 사항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안을 주목하여 긴급한 행동을 취하고 현재 초안 단계에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분류 태그	기구	프라이버시
	주제	법률 및 제도 개혁
	대상	사생활 및 개인정보

분류 구 특별절차 방한 조사 결과 | 유엔문서번호 : A/HRC/46/37/Add.6 |
분 소관 : 인권이사회 | 배포일 : 2022. 7. 8.

국문 제목 대한민국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 (2021)

검색 결과 56.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의 감시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규제 체계가 미흡하므로, 시급하고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분류 태그	기구	프라이버시
	주제	법률 및 제도 개혁
	대상	사생활 및 개인정보

분류 구 특별절차 방한 조사 결과 | 유엔문서번호 : A/HRC/46/37/Add.6 |
분 소관 : 인권이사회 | 배포일 : 2022. 7. 8.

국문 제목 대한민국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 (2021)

검색 결과 57.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의 내부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의 인권보호국장을 대표로 하는 상설 감사팀을 신설해야 한다. 이 팀들은 개인이나 부서에 대한 진정 조사 뿐만 아니라 ‘자체 조사(own initiative basis)’와 ‘무작위 표본 추출(random sampling)’을 통해 선정된 특정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권한을 부여 받고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분류 태그	기구 프라이버시
	주제 법률 및 제도 개혁 사생활 및 개인정보
	대상

분류 구분 특별절차 방한 조사 결과 | 유엔문서번호 : A/HRC/46/37/Add.6 |
분 소관 : 인권이사회 | 배포일 : 2022. 7. 8.

국문 제목 대한민국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 (2021).

검색 결과 58.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법으로 부여된 권한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제로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분류 태그	기구 프라이버시
	주제 법률 및 제도 개혁 사생활 및 개인정보
	대상

분류 구분 특별절차 방한 조사 결과 | 유엔문서번호 : A/HRC/46/37/Add.6 |
분 소관 : 인권이사회 | 배포일 : 2022. 7. 8.

국문 제목 대한민국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 (2021).

검색 결과 59. 국가정보원은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법으로 강제했던 불투명한 문화와 관행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비밀로 유지해야 할 정보만 실제로 비밀로 유지한다면, 한국 사회가 국정원의 역할과 업무 방식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엄격한 감독과 법 준수와 함께, 국가정보원이 한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류 태그	기구 프라이버시
	주제 법률 및 제도 개혁 연구 및 그 밖의 이행 조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대상

분류 구분 특별절차 방한 조사 결과 | 유엔문서번호 : A/HRC/46/37/Add.6 |
분 소관 : 인권이사회 | 배포일 : 2022. 7. 8.

국문 제목 대한민국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 (2021).

검색 결과 60.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의 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설 기구인 감시 및 수사권 위원회 (Surveillance and Investigatory Powers Commission, SIPC) 를 신설해야 한다.

분류 태그	기구 프라이버시
	주제 독립 모니터링 기구 법률 및 제도 개혁 사생활 및 개인정보
	대상

분류 구분 특별절차 방한 조사 결과 | 유엔문서번호 : A/HRC/46/37/Add.6 |
분 소관 : 인권이사회 | 배포일 : 2022. 7. 8.

국문 제목	대한민국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 (2021).
검색 결과	61. 이 새로운 독립 기관(SIPC)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분류 태그	<div> <div>기구</div> <div>프라이버시</div> </div> <div> <div>주제</div> <div>독립 모니터링 기구</div> <div>법률 및 제도 개혁</div> <div>사생활 및 개인정보</div> <div>인권 이행을 위한 예산 및 자원</div> </div> <div> <div>대상</div> </div>

분류 구 분 특별절차 방한 조사 결과 | 유엔문서번호 : A/HRC/46/37/Add.6 | 소관 : 인권이사회 | 배포일 : 2022. 7. 8.

국문 제목	대한민국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 (2021).
검색 결과	62. 특별보고관은 현재 경찰과 정보기관의 전화통화와 그 밖의 통신수단 메타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사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청에 주목한다. 민감한 정보로 간주되는 메타데이터 요청은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며, 연간 약 30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메타데이터 요청은 연간 640만 건에서 930만 건에 이르는 엄청난 수치로, 이러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때로는 무심코 요청되며,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열람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접근을 막고 현재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청의 수를 줄임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요청은 사법부의 감독을 받거나 새로운 SIPC의 감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수치가 지속된다면, 24시간 연중무휴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640만 건의 요청)을 감당하기 위해 500~800명의 신규 판사 또는 법률 교육을 받고 정보 문제에 대한 특별 임시 교육을 받은 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분류 태그	<div> <div>기구</div> <div>프라이버시</div> </div> <div> <div>주제</div> <div>독립 모니터링 기구</div> <div>법률 및 제도 개혁</div> <div>법의 지배와 불처벌</div> <div>사생활 및 개인정보</div> </div> <div> <div>대상</div> </div>
-------	---

분류 구 분 특별절차 방한 조사 결과 | 유엔문서번호 : A/HRC/46/37/Add.6 | 소관 : 인권이사회 | 배포일 : 2022. 7. 8.

국문 제목	대한민국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 (2021).
검색 결과	63. 특별보고관은 완전히 독립적인 채용 및 인력 배치를 허용하는 법률 및 예산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개혁은 대한민국이 2018년 10월 10일 서명을 위해 개방된 최신 버전에 있는 협약 108+(Convention 108+)으로 확립된 국제 표준에 훨씬 더 근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55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한 이 국제 표준이 제정된 협약에 한 국도 가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여기에 권고된 방식으로 데이터 보호 권한을 강화하면 한국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으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수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기관의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4~5%로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민국은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분류 태그	기구 프라이버시
	주제 국제문서 가입 및 비준 법률 및 제도 개혁
	사생활 및 개인정보 인권 이행을 위한 예산 및 자원
대상	

분류 구분 특별절차 방한 조사 결과 | 유엔문서번호 : A/HRC/46/37/Add.6 |
 분 소관 : 인권이사회 | 배포일 : 2022. 7. 8.

국문 제목 대한민국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 (2021)

검색 결과 64. 제주도는 특히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하기 몇 년 전부터 스마트 시티의 위험성에 대해 자주 언급해 왔다. 스마트 센서를 설치해 도시 내 사람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이미 수집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취합함으로써 스마트 시티는 주민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감시 체제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자료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PIA)를 완료하여 안전장치를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스마트 시티는 빠르게 진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는 시민 사회, 특히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다른 안전장치로는 개인에게 '감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선택사항을 제공하고, 자동화 프로파일링에 대한 억제책을 개발 및 채택하고, 프로젝트에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및 프라이버시 기본설계 원칙을 통합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맥락에서도 정부가 시민이 생산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는 특별보고관에게 스마트 시티의 주요 목표는 기업 투자에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그 설계의 중심에 두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시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의 개선과 합리화도 자료 수집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분류 태그	기구 프라이버시
	법률 및 제도 개혁 시민사회와 협력 및 협의
	주제 연구 및 그 밖의 이행 조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대상	

총 1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보호정책

(우)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화 02) 2125-9888 / 팩스 02) 2125-0918 (국제인권과)

이메일: uhr-desk@humanrights.go.kr 기술문의: webmaster@humanrights.go.kr

COPYRIGHT(C)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